

## 한국사회 민주화의 과제와 전망

박 석 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1. 들어가는 말

#### 1-1. 정치적, 절차적 민주화의 일정한 진전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결과 87년 6월, 마침내 군사독재체제를 극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반쪽 승리에 불과하였다. 대통령 직선제가 쟁취되어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가능성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그해 12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하게 된다. 국민직선을 통한 군사독재세력의 교체집권이 실행된 것이다. 반쪽 승리에 그친 원인은 복잡적이지만, 군사독재 세력이 국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밀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였을 때, 민주화운동 상층 지도부가 더 이상의 투쟁을 사실상 접어 버리고, 대신 헌법개정 논의와 대선후보 논쟁에 매몰되어 버린 것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정권교체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대통령선거가 3번 실시되었는데, 그때마다 “결과적으로” 매우 조금씩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영역에서는 군사독재시절에 비하면 어느 정도 민주화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살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민적, 정치적 민주화는 미완성인 상태에 있다.

#### 1-2. 군사독재체제에서 재벌독재체제로의 전환

군사독재체제는 표면상 이미 해체되었지만, 그 해체된 자리에 민주주의가 들어선 것

이 아니라, 재벌이 군사독재 세력을 대신하여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재벌독재체제”가 이미 시작된 셈이다. 한편 군사독재체제의 또 다른 내용인 개발독재체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 변형된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 1-3. 민주주의에 대한 2중적 성격

김대중 대통령 정부나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비록 권력운동에 있어서의 무능 등의 사유로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토대를 이루는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에 추종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 농민 등 기층대중들의 이해관계와 수시로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양측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게 된다. 즉, 수구세력들로부터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개혁과 관련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기층대중운동 세력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방향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

### 1-4. 혼돈 속에서 일진일퇴하고 있는 실질적 민주화

한편 한국사회의 실질적 민주화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영역에서의 민주화 문제는 일진일퇴하면서 아직 개선과 진전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IMF 관리경제체제하에서 밀어닥친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광풍 앞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대폭 후퇴하고 있다.

## 2. 한국사회 민주화의 과제와 전망

### 2-1. 사회적 빈곤 문제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 고소득층과 사회적 빈곤층과의 소득격차의 확대 및 중산층 몰락 현상으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350만 명을 넘는 신용불량자 문제나 전체 노동자 숫자의 57~58%에 달하는 800만 명에 가까운 규모의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해 있다. 또한 노동능력과 노동기회를 잃어버린 극빈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일자리를 갖고 일하고 있지만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도 급증하고 있다.

한번 일자리에서 내몰리면 다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태 즉 사실상 “영구실업” 상태에 빠지는 중장년층 실업자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또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해 보지도 못한 청년실업자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결과 중소기업자들의 광범한 몰락도 두드러진 현

상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등으로 일터에서 내쫓긴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영업으로 대거 진입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급과잉 현상과 때마침 불어 닥친 저소비 불황으로 이들의 몰락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빈곤의 해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이를 해소할 실천적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대신 사회통합적, 대안적 경제정책을 실현하는 길이 유일한 해결 방향이 될 것인데, 어떤 경로로 또 어떤 동력으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아직은 그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 2-2. 비정규노동자 문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추구전략은 민주노조운동의 압살전략과 함께 1990년대 초반 이래 한국정부와 자본측의 지속적인 현안 과제였다. 정부와 자본측은 합작하여 한편으로는 전투적 노동조합을 직접 탄압, 공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회전략 즉, 비정규노동자를 광범하게 도입하여 분단통치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조운동을 공략해 들어 왔다.

중대규모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기업별노조 방식”으로 조직된 한국의 민주노조진영은 그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노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의 50~60% 정도의 임금을 받는 차별 대우를 받는 상황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진영이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업별로 조직을 시도하는 기업별 비정규노조의 강도 높은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기존의 민주노조진영에서도 최우선적 운동목표로 공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작년 가을부터 정부, 여당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비정규노동자를 대폭 확대시키는 “노동법 개악안”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나서서 격렬한 반대를 하였고, 끈질긴 법안개악 반대투쟁의 결과 현재는 잠정적으로 국회통과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반면 노동계가 요구하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안의 국회통과는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는 단지 노동운동 진영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할 시민사회 공통의 현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극히 미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2-3. 이주노동자 문제

현재 한국에는 약43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중 합법적인 체

류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등록된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55%정도인 23만3천 명 정도이고 체류기간을 넘겨 미등록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45%인 18만8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금년 말 정도 되면 그 비율이 역전되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숫자가 28만~30만 명 선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 숫자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62%~63%에 달하게 되고 등록된 이주노동자 숫자는 17만~18만 명으로 소폭 감소하여 전체의 37%~38%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작년(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부분적인 사면/양성화 조치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정착에 실패하고 있다. 또한 편법적 외국인력정책인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2007년부터 폐지될 것이라 정부당국이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력을 더욱 확대된 형태로 수용하게 될 것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정부당국의 정책 방향은 단기간 저임금의 단순노동에 종사시키다가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로테이션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체류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이주노동자들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한국정부는 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만으로 노조를 조직하는 방식은 그 효율성에 비춰 볼 때 여러 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실험할 필요가 있다.

#### 2-4. 공무원노조의 문제

현재까지 공무원노조의 설립, 운영은 극히 예외적인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미 1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건설하여 활동하고 있다. 작년 가을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 완전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까지 감행하였지만 정부의 강력한 탄압과 여론의 질타에 의해 실패하였고, 그 결과 작년 말에 단결권과 한정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시키는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서 입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수십 년간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민중들 위에 군림해 왔던 공무원 사회를 공무원노조 건설을 통해 민주적으로 재편해 내는 일은, 공무원노조에게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팔을 걷고 나서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한국사회의 실질적 민주화와 부정부패 추방, 그리고 사회공공성 확대 강

화에 관건적 요소 중 하나임이 분명한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시민사회가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 협력해 나가야 마땅하다.

#### 2-5. 개방 문제

한국정부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노선에 따라 한칠레 FTA, 쌀시장 개방 등 농업개방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공공적 영역으로 남겨 뒤야 할 교육 부문과 보건의료 부문도 개방과 영리사업화의 길로 마구 내몰고 있다. 또 환경, 노동 관련 공적 규제를 모두 면제시키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고, 기업도시를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하에서 5년 동안 국제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무려 121조원(약1,100억 달러)의 이득을 수취해 갈 정도로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 부문에서의 사회공공성의 확대, 강화 문제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 2-6. 반전평화, 군축

한국정부는 부시행정부의 요구에 순응하여 이라크 침략전쟁에 공범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한 압박전략의 구사와 북한의 핵보유선언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대만의 경쟁적인 군비증강은 동북아 지역을 대표적인 전쟁 위험 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각국 시민사회의 노력과 이의 국제적 연대투쟁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 2-7.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정부는 지금도 핵폐기장 건설, 새만금간척공사 등 개발독재적 환경파괴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은 오직 '립서비스' 수준으로만 작동되고 있을 정도이다. 마구잡이식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의 결과 식수 가격이 휘발유 가격에 맞먹는 수준이 되는 등 바야흐로 자연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떤 동력으로 어떤 경로로 실현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모색되고 또 실천될 필요가 있다.

#### 2-8. 반전 반세계화 국제연대투쟁의 모색

오는 11월 18~19일에 부산에서 APEC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에 부시대통령, 고이즈미 총리 등 전쟁책동, 신자유주의세계화 추동의 원흉들이 총결집될 예정이다. 한국

의 민중운동권에서는 이 시기 국제적인 차원의 강력한 반전, 반세계화 투쟁을 전개할 의지를 모으고 있다. 대략 장상회의 이전 2~3일간 반전, 반세계화 의제를 갖고 민중포럼을 가능하면 국제적인 차원으로 추진하고, 개막식이 개최될 11월 18일에는 대규모 대중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적인 APEC 반대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연대투쟁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인 WTO각료회담 저지투쟁에도 한국민중운동세력의 대중적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연대투쟁 방함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한국 민중운동 진영은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를 “부시잡으러 부산가자!”, “부산 찍고 홍콩가자!”로 정하고 이의 조직화 사업에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 3. 맺는 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황은 전통적 과제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영역의 민주화도 채 완수되기 전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영역의 각종 과제들이 중첩적으로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난 시기 한국민주화운동이 그러했듯이, 민중진영과 시민사회의 굳건한 연대와 이에 기반한 적극적인 국제연대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